

코스피	2567.45	코스닥	855.46
	(-0.10)		(-3.70)
금리	3.378	환율	1317.40
	(+0.005)		(+4.70)

'5G 과장광고'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 03



동물권 인식 개선에도 학대 여전 미미한 처벌, 5년간 구속 4명 뿐

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

〈上〉 반려동물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최근 '동물권'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동물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학대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권리', '생존 위협을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과 수명에 따라 살아갈 권리'라고 유네스코 세계동물 권리선언은 정의하고 있다.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호' 강화 차원의 동물보호법 개정도 이뤄졌다. 다만 축산·도축 관련 농장 동물, 실험동물 보호 등 문제는 여전하다. 메트로경제는 반려동물, 농장 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권' 정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물이 갖는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학대를 계기로 시작했다. 그동안 동물의 생명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권'은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식한 개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2022년 3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동물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접수·처분 현황〉

(단위: 명)

구분	사건접수(신수)	처분계	처분				
			구공판	구구속	불구속	구약식	불기소
2017년	526	509	0	18	183	260	48
2018년	613	601	1	10	176	345	69
2019년	1,070	1,070	1	29	320	538	182
2020년	1,125	1,110	0	30	325	540	215
2021년	748	779	2	26	316	241	194
2022년(1~3월)	167	152	0	5	52	41	54
총계	4,249	4,221	4	118	1,372	1,965	762
%	-	100	0.1	2.8	32.5	46.6	18.1

동물 생명보호 관심 높아져 물리적·사육장 학대 금지 등 동물보호법 개정 규정 강화

학대범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불기소·약식명령 처분에 그쳐

33%가 '동물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5%)은 동물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동물권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동물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 질문했을 때 답변은 달랐다.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이후 동물을 가두는 방식의 환경 개선 요구와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2년 9월 13~26일 전국 거주 20~64세 국민 5000명에게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조사 내용 가운데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와 관련된 물리적 학대 행위(92.3%)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공중 설치 사육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등)이라고 꼽은 답변은 절반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점 역시 동물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대목으로 인식된다.

〈2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위)와 BMW 수소연료전지차 iX5 하이드록센.

갈긴 먼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 성장 가능성에 투자·개발 지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글로벌 화두가 된 가운데 에너지 중 '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개발·시스템·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목록에 올라가 있다. 매년 큰 성장률을 보이는 전기 모빌리티 시장이 대체를 이끌고 있지만, '수소 모빌리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 포기 못하는 '수소'

수소는 전기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운송수단에 적용할 시 운영 항속거리가 짧은 이유 등으로 전기차 개발에 비해 현격히 대중과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친환경'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른바 '진입장벽'이 수소보다 높지 않다는 인식도 기업들의 투자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익성 경쟁까지 붙어 수소 개발 영역에서 멀어지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반대로 수소는 개발부터 상용화하기까지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도요타, 혼다, BMW 등이 수소 모빌리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능성'과 '미래 기술 선점' 때문이다. 수소의 생산 방식 자체에서 수소를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업계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거치고 있지만, '수소' 개발 자체는 기업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장은 전기차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만큼의 사업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소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소 모빌리티의 시장 성장도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도요타는 모토 스포츠 경기이자 참가 차량의 성능과 내구

성을 두루 보는 '내구레이스'에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내연차를 내놓는 등 수소 엔진 모델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도요타는 수소차 관련 테스크포팀을 구축하고 수소차의 출력과 토크 향상, 항속거리 연장 등 다각도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24시간 내구레이스'에 도요타의 액체 수소 엔진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 대비 수소차 시장성 제로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벽 높아

현대차·도요타 등 완성차기업들 미래기술 선점 위해 끝없이 도전

BMW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일찍이 수소차 개발에 뛰어든 기업이다. 2007년에는 7시리즈 기반의 12기통 수소차 '하이드록센7'의 시승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워르겐 굴트너 BMW 그룹 수소 기술 및 차량 프로젝트 총괄 박사가 "수소 승용차 양산 모델을 2020년대 후반에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전히 수소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BMW는 자사의 'iX5 하이드록센' 모델에 ▲6kg 수소탱크 ▲BMW가 자체 개발한 배터리 ▲연료전지 스택 등을 장착해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시범 생산 중이다.

이밖에 혼다는 지난 2월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2024년 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시간 집회 못한다

정부 차원 집회 종합대책 검토 야간집회 금지, 소음기준 강화 등 야당과 '집시법' 개정 협의 할 것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은 내놨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

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힘 "전주영화제, 내놓고 文 헌정영화 지원... 文 당시 현직"
▲박진 "우크라이나 10조원 지원'은 오보... 해명 요구" /사진 뉴스스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미 북핵차석대표 미국서 협의... "北 도발 시 단호 대응"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르면 이번 주 재가 /사진 뉴스스
▲국민의힘,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100→200만원 상향 추진